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6호  
2020.7.20

## 정책동향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성공하려면
- 7·10 대책, 다주택 보유 주체 압박 수위 높여

## 산업정보

- BCG의 2020년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 건설산업의 넥스트 노멀

## 건설논단

- 산업 안전, 처벌 강화가 답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성공하려면

-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정부는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를 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②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가’, ③ ‘경제·사회 구조 전환 및 노동시장 재편’의 3가지로 요약함.

<표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의 우리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진단

구분	내용
디지털 경제 전환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국가의 산업·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체에 타격이 집중
저탄소·친환경 경제 요구 증가	- 전 세계적으로 그린 경제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린 경제 전환에 뒤처질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또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신산업 창출의 필요성 증가
노동시장 재편	-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실업,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직업훈련 확대 및 고도화와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등 안전망 강화 필요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제7차 비상경제회의의 발표자료 내용 요약.

-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①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②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그린 뉴딜’, ③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 불안과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천명함.

### 2025년까지 총 160조원 투자 계획

- 이번 계획을 통해 올해 6.3조원, 2022년까지 67.7조원(누적), 그리고 2025년까지 160조원(누적)을 투자할 계획임. 총사업비 160조원 중 국비는 114.1조원, 지방비는 25.2조원, 민간투자는 20.7조원 규모임.

<표 2>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별 투자 계획(국비 기준)

(단위 : 조원)

구분	분야	세부 과제	투자액(~2022년)	투자액(~2025년)
디지털 뉴딜 (12개 과제)	DNA 생태계 강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3.1	6.4
		1·2·3차 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6.5	14.8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2.5	9.7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0.4	1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3	0.3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3	0.5
	비대면 산업 육성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0.2	0.4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0.6	0.7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0.3	1
	SOC 디지털화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3.7	8.5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0.6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0.1	0.3
그린 뉴딜 (8개 과제)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2.6	6.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2	2.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3	3.4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1	2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3.6	9.2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5.6	13.1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2	3.6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1.2	2.7
안전망 강화 (8개 과제)	고용사회 안전망	쉴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8	3.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4.3	10.4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3	7.2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0.9	1.2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3	0.6
	사람 투자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0.5	1.1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0.6	2.3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0.4	0.6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제7차 비상경제회의의 발표자료 내용 요약.

## ■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보완 대책 필요

- 총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재정자금(국비+지방비)의 비중이 87.1%에 달하는 등 이번 계획은 재정 확대 위주의 대책임.
  - 동 계획에서는 민간투자가 총 20.7조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의 사업이 일회성 지출의 성격이 강해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이번 계획이 실제로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가령 ‘5G·AI 융합 확산 사업’의 경우 스마트 인프라(솔루션)에 대한 유지관리 역량과 계획을 갖춘 업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 역시 공공부문에 의한 직접 설치 및 운영보다는 민간사업자들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대상 시설물을 ‘민간 건물’로 확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축 또는 개량되는 대형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또는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 7·10 대책, 다주택 보유 주체 압박 수위 높여

- 공급 신호 긍정적이나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압박해 임대시장 어려워질 듯 -

### 7월의 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세제 강화 등 다주택자 압박 강도 높인 7·10 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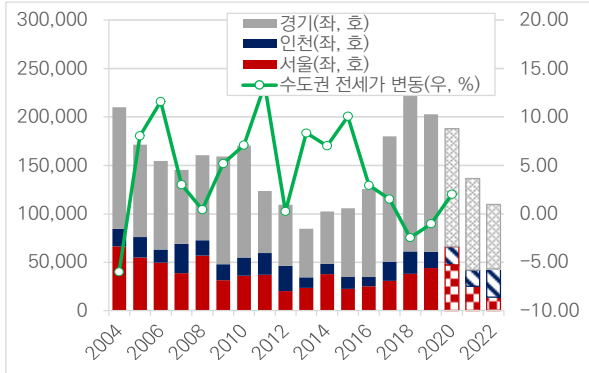
- 7·10 대책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7·10 대책의 큰 틀은 ① 주택 공급과 ② 세제 개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말부터 천명된 것으로 기존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생애최초 구입자 및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함.
  -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최소 5%p~최대 15%p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해 그간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소득 계층의 청약에 통한 당첨 가능성을 높였음.
  - 특히, 민영주택에까지 혜택을 확대해 그간 청약시장에 제기되었던 비판을 일부 수용함.
- 다음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판매할 것을 촉구함.
  -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보유세 구분 없이 세율을 인상함.
  -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해 법인의 비사업용 주택 취득을 간접 규제함.
  - 부동산 자산 신탁은 보유세 납세의무자를 원소유자로 변경함으로써 보유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함.
-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는 다세대 및 다주택 10년 장기임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을 폐지함.
  - 장기임대 유형 중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기존 주택 역시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조치함.
  - 즉, 결과적으로 다세대·다주택 10년 장기임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을 폐지하였음.

### 매매시장에는 물량 풀리겠지만, 전세가 상승 압박을 피하긴 어려울 듯

- 하반기 임대시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는 ① 내년 수도권 공급 감소, ②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 증가, ③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음.
  - 대체로 공급량과 전세가 변동률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데, 2021년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2019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임대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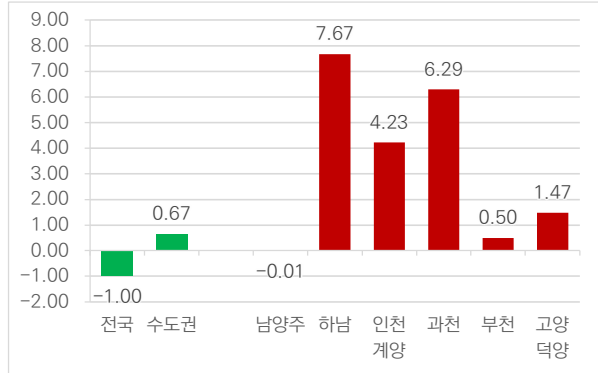
-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들로 인해 서울뿐 아니라 신도시 예정지 인근 전세가 역시 상승하고 있음.
- 여기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가팔랐고,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lt;그림 1&gt; 수도권 공급 및 전세가 변동률(호, %)



주 : 2020~2022년은 부동산 114의 추정치이며 2020년 전세가 변동률은 5월까지 변동률을 나타냄.  
 자료 : (주)부동산114(2020), 김성환(2020)을 재인용.

&lt;그림 2&gt; 3기 신도시 인근 전세가 상승률(%)



주 : 3기 신도시가 2018년 9·21 주택공급 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만큼 2018.8~2020.5의 전세가 변화율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 국토교통부(2020), 김성환(2020)을 재인용.

- 여기에 7·10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물량을 임의로 조절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 보유세 수준을 감안하면 법인 및 다주택자 보유 물량 중 일부가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음.
  -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중 실거주 주택을 제외하면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sup>1)</sup>, 다주택자가 매매시장으로 진입하면 그만큼 민간 임대차시장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임.
  -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역시 임차 물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전세와 월세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임차시장의 상승 압력 지속시 연말 임대차 3법 도입에 신중 기해야

- 연내 시행 예정으로 당·정·청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 역시 현재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는 최초 1회에 한해 임대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권익 보호 조치라는 점에서 언젠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전세의 무제한 연장 등 급진적인 의견은 건전한 임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
  - 또한, 임대인 우위 시기에 적용될 경우 임차인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에 있어 사회적 중지를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임.

김성환(부연구위원 · shkim@cerik.re.kr)

1) 국내 다주택자는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기준에 따르면 219.2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8년 지방세 통계(행정안전부, 2019)에 따르면 그중 별장으로 분류돼 중과세를 부담하는 주택은 651채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미국의 경우 2010년 센서스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3.5%가 별장(dwelling for occasional use)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BCG의 2020년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 혁신 기업은 산업의 영역과 상관없이 두각을 드러내 -

### 2020년 글로벌 5대 혁신 기업 : Apple, Alphabet, Amazon, Microsoft, Samsung<sup>2)</sup>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2020년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순위에서 애플(Apple)사가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 1위에 복귀함.
- 가장 높은 순위 상승을 기록한 기업은 화웨이(Huawei)로 2019년 48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으며 알리바바(Alibaba)와 월마트(Walmart)도 7위와 13위에 위치하며 높은 순위 상승을 기록함. 이 외에 텐센트(Tencent), 넷플릭스(Netflix), 샤오미(Xiaomi) 등은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함.
- 2005년 이후 BCG의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순위에 포함되었던 기업은 총 162개임. 이 중에 8개(Apple, Amazon, Samsung 등) 기업만이 매년 순위권에 포함되었으며, 오직 20개 기업만이 10번 이상 순위권에 들었음. 이들 20개 기업은 기술, 도소매, 자동차, 산업재, 소비자재 생산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임.

<표 1>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1	Google	Apple	18	LG Electronics	LG Electronics	35	Stryker	Salesforce
2	Amazon	Alphabet	19	Vale	Intel	36	NTT Docomo	JPMorgan Chase
3	Apple	Amazon	20	JP Morgan Chase	Dell	37	Toyota	Uber
4	Microsoft	Microsoft	21	McDonald's	Siemens	38	Volkswagen	Bayer
5	Samsung	Samsung	22	Marriott	Target	39	3M	Procter & Gamble
6	Netflix	Huawei	23	Alibaba	Philips	40	General Motors	Royal Dutch Shell
7	IBM	Alibaba	24	Bayer	Xiaomi	41	Dell	Toyota
8	Facebook	IBM	25	AT&T	Oracle	42	Walmart	Nestle
9	Tesla	Sony	26	Allianz	Johnson & Johnson	43	eBay	ABB
10	Adidas	Facebook	27	BMW	SAP	44	HP Inc.	3M
11	Boeing	Tesla	28	SAP	Adidas	45	ING	Unilever
12	BASF	Cisco Systems	29	Philips	Hitachi	46	BP	FCA
13	T-Mobile	Walmart	30	Royal Dutch Shell	Costco	47	Daimler	Novartis
14	Johnson & Johnson	Tencent	31	AXA	JD.com	48	Huawei	Coca-Cola
15	DowDuPont	HP	32	Unilever	Volkswagen	49	Rio Tinto	Volvo
16	Siemens	Nike	33	Salesforce	Bosch	50	Hilton	McDonald's
17	Cisco Systems	Netflix	34	Pfizer	Airbus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BCG),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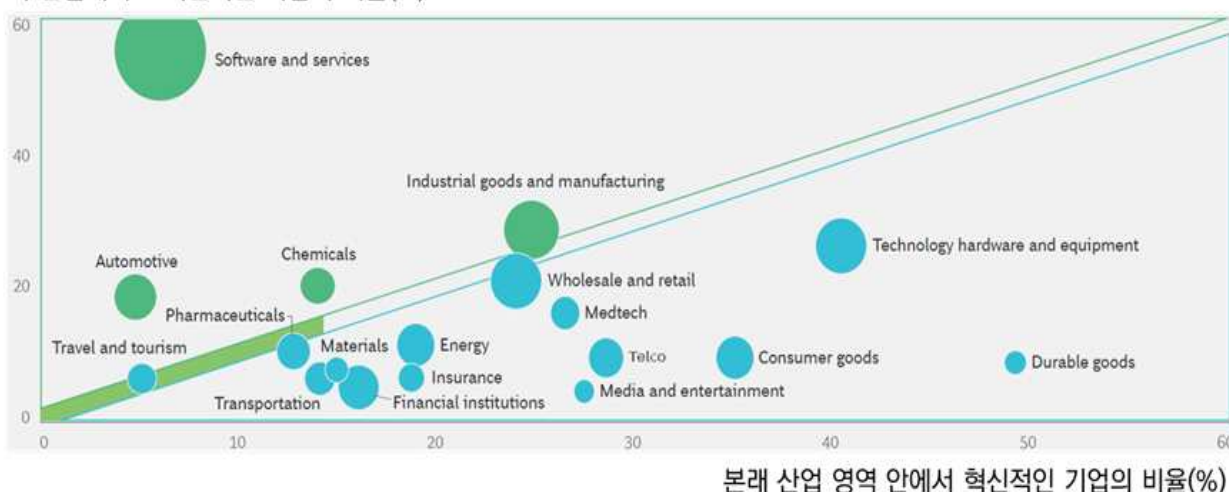
2) Boston Consulting Group(BCG)의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2020」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 글로벌 혁신 기업은 본래의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혁신 활동을 지속

- 세계의 모든 산업은 산업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하게 기술 산업(technology industry)으로 전환되고 있음.
- 타 산업 영역으로도 진출해 해당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등의 혁신 활동은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서의 필수 역량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예를 들어, 3M社は 소비재, 화학, 제조, 의료기술 등 다수의 산업 영역에서 혁신 경영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임.
- 3M과 같은 기업이 많은 산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자동차, 화학, 산업재 및 제조 분야로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그림 1> 타 산업에서도 혁신하는 기업이 많은 산업 분야

타 산업에서도 혁신적인 기업의 비율(%)



본래 산업 영역 안에서 혁신적인 기업의 비율(%)

## ■ 기업 혁신 시스템의 10가지 요인이 혁신 리딩 그룹과 후발 그룹 간 격차를 설명

-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기업 내 혁신 추구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인에서 후발 기업들과 차이를 보임.
- 혁신 시스템의 필수 10가지 요인은 ‘혁신 비전의 공유’, ‘혁신의 영역’, ‘혁신 거버넌스’, ‘성과 관리’, ‘조직 운영과 생태계 구축’, ‘역량과 문화’, ‘시장에 적합한 아이디어’, ‘프로젝트 관리’, ‘영업 관리(funnel management)’, ‘포트폴리오 관리’임.
- 또한, 혁신 기업들은 시스템의 필수 10가지 요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건설산업의 넥스트 노멀

- 맥킨지 건설산업 미래 생태계 변화 설문, 9가지 변화 동인과 영향 분석 -

### ■ 코로나19의 위기가 건설산업의 변화 촉진

- 첨단 기술에 따른 건설산업 변화를 분석해온 맥킨지는 최근 코로나19의 위기 이후 건설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함.<sup>3)</sup>
- 첨단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위기 등 일련의 상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변화가 적었던 건설 산업의 생산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코로나19의 위기가 이러한 건설산업의 변화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함.
  - 100인의 경영진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코로나19의 위기가 산업의 변화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응답자의 절반은 새로운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를 늘렸다고 밝힘.
  - 특히, 디지털화와 공급망 관리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으며, 응답자들은 위기가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신규 진입을 둔화시켜 기존의 기업이 변화를 주도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함.

### ■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변화

- 그동안 건설산업이 자동차와 같은 현대화된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에는 작게 나뉜 생산과정과 맞춤화된 상품 생산, 낮은 자본 투자, 인허가부터 안전 및 현장관리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규제 등 건설산업의 특징이 존재함.
  - 사업의 일정과 비용 초과는 건설산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비즈니스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수익이 낮은 상황임.
  - 사업의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이며,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과 경기 의존도로 인해 건설사들은 임시 직원과 하청업체에 의지하게 됨. 이는 생산성 저해, 품질과 고객 만족도 저하를 가져옴.
- 맥킨지는 앞으로 9가지 변화 동인이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자재 공급자, 개발자, 발주자, 기계 및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3) Mckinsey(2020. 6),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 How disruption is reshaping the world's largest eco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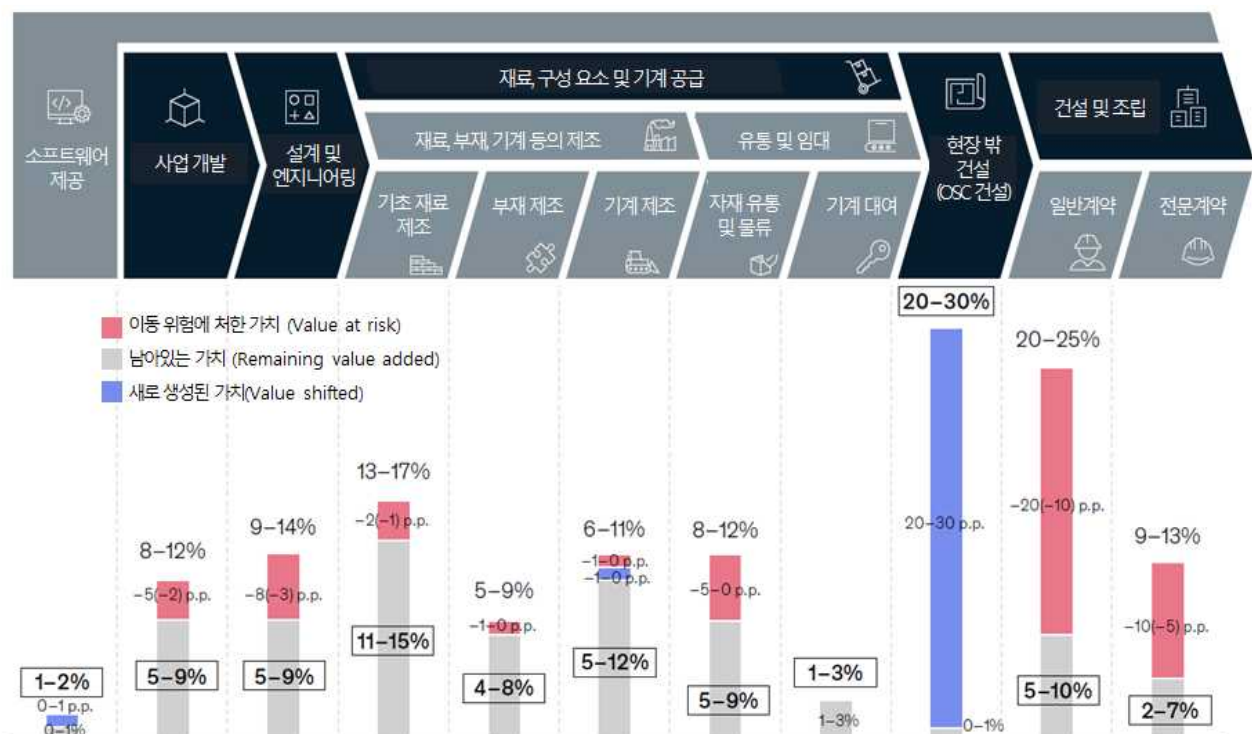


- 9가지 변화 동인은 ‘제품 기반의 접근방식’, ‘전문화’, ‘가치사슬 관리와 산업 차원의 공급망 통합’, ‘통합’, ‘고객 중심 및 브랜딩’,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국제화’, ‘지속가능성’ 등임.
- 조사에 참여한 경영진의 75% 이상이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고 있으며, 60% 이상은 향후 5년 이내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 부문별로 가치 변동이 나타날 것이며, 일반 건설업체는 모듈 제조업체와 이를 고용하는 개발자, 변화에 맞춰 사업 모델을 조정한 기업과 경쟁하게 될 것임.

- 건설산업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선, 상업용 항공기, 농업, 자동차 등의 4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생산 기술과 새로운 작업 방식이 산업 혁신의 시작이 되었으며, 변화를 가장 잘 다루는 부문으로 산업의 부가가치가 이동함.
- 현재 건설산업 체계에서 가치 창출은 일반 건설업체에서 가장 높으나, 향후 일반 건설업체의 부가가치 중 10~20%p, 전문 건설업체의 부가가치 중 5~10%p가 다른 생산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음.

<그림 1> 건설산업 생산단계에서 예상되는 가치의 변화



자료 : Mckinsey(2020.6), p.46, 그림 14의 일부.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ky@cerik.re.kr)

## 산업 안전, 처벌 강화가 답인가

기업경영에 있어 기업의 윤리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논의는 오래된 이슈다. 산업 발전 초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경제 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 내·외부자의 인권, 거래 상대방과의 공정거래, 환경 보존, 경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 등 사회적 책임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넓어질수록 여러 법률과 규제가 만들어졌다.

산업 안전과 관련된 기업 책임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산업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이전부터 주요한 산업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각 산업 관련 부처에서는 앞다퉀 관련 안전 대책을 발표해왔다. 특히,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각종 시설물의 사고가 있을 때마다 건설기업과 현장의 안전 관리, 처벌 관련 법률과 규제를 강화해 왔다.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 및 규제가 그동안 지속 강화돼 왔음에도 이전 물류센터 화재사고, 광주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최근까지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이전의 많은 산업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금까지의 대처는 천편일률적으로 처벌 강화 등 사후 관리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도 감시 조직 및 인력의 강화 등 비용과 인력의 양적 투입에 초점을 맞춰 왔다.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등 기업 활동 내에 안전관리가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의 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

둘째는 기존 산업 안전 대책들이 산업과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을 두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직의 행동 원리를 연구하는 관점으로 사회·

기술 시스템적 관점이 있다. 즉, 산업이나 기업은 생산기계, 설비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이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절차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기술 시스템이고, 조직 내의 어떤 활동은 다른 모든 분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시스템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업 안전 대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현장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표이사 등에 3년 이상 유기징역, 법인에게 1억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외에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손해액의 3~10배 범위 내 손해배상책임도 지도록 했다. 인명 사고 등 중대 재해를 막는 데 있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각 산업의 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도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에만 국한된 법률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간다.

이제는 산업재해의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산업의 인식 전환, 나아가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나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산업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는 근본적인 법률안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될 때, 법령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업들 모두가 현행 법률안이 제안된 취지에 동감하지 않을까. <머니투데이, 2020.7.7>